◆공론조사란?

청와대는 7월 29일 공론조사에 대해 "특정 현안에 대해 찬반 주장 등 균형 잡힌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은 상태에서 대표성 있는 참여자간 토론을 통해 형성된 국민의 의사인 '공론'을 확인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1차로 여론조사의 찬반 비율 또는 무작위로 참여자를 선정한 후 공론의 장(場)에서 충분한 정보제공과 전문가 패널 등과의 토론을 거친 뒤 2차 조사를 실시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조영동 국정홍보처장은 "여론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개 TV 토론 등을 이용해 이해관계자와 불교계, 환경단체 등 대표성 있는 시민들을 뽑아 관련 정보를 제공, 토론을 벌인 뒤 여론조사를 하고, 다시 토론을 거쳐 2차로 공론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론조사는 지난 94년 영국에서 유럽 단일통화 가입문제와 관련해 최초로 실시됐다.

'공론조사' 방법 내세워 북한산 도로 관철 의도

불교계·시민단체, '갈등조장' 수용 못해

◆불교계 어떻게 볼 것인가?

공론조사와 관련해 청와대는 "사회 현안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나가되 서로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불가피하게 해결방안을 선택해야 할 경우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공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불교환경연대 등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을 폐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지적한다. 즉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30일 한명숙 환경부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교계의 이런 정서를 전달하며 '공론조사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범어사, 해인사, 쌍계사, 통도사 등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대표단도 30일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과 만난 자리에서 "불교계와 약속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교단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저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도 31일 집행부 회의를 개최하고 "공론조사는 정부가 스스로 권한을 포기한 무책임한 처사"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불교계 "약속 불이행땐 교단 저항 직면할 것"

시민단체 "정부 스스로 권한 포기 무책임한 처사"

불교계에 전달한 공약집을 통해 북한산 관통노선을 백지화하고 대안노선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당선이 확정된 후에도 이 공약을 불교지도자들 앞에서 재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조사라는 낯선 용어를 동원해 현 노선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전문가들로 구성돼 지난 6월 초 활동을 마감한 노선재검토위원회에서 다수의 위원들이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 불가'의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공론조사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을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는 행위일 뿐 아니라 참여정부의 환경철학 부재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불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론조사 수용불가'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건교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계종 총무원도 이를 고려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대응팀 구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새만금 간척사업처럼 북한산 문제도 법적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불교환경연대 정성운 사무처장은 "공론조사로 갈 경우 시공사측의 사전작업등으로 인해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수도 있다"며 "참여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명우·남동우 기자

◆대응책은?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스님은 7월 30일 한명숙 환경부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문광부 종무실 왜 폐지하려 하나?

문광부가 종무실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의 조직 혁신 방침에 따른 것이다. 문광부가 현재 마련하고 있는 자체 조직 개편안도 지방분권화시대에 맞춰 자치단체나 민간에 이양할 것은 이양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종무실 폐지도 이런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과거 군사독재시절 각 종단과의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 종무실이 설치되고 역할을 해 왔지만, 지금은 그 기능이 크게 약화돼 굳이 별도의 독립부서로 둘 필요가 없다고 문광부는 판단하고 있다.

현재까지 종무실은 종교정책업무를 총괄하고 종교인들 간의 화합과 갈등 해소를 통해 종교가 우리 사회에 건전한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해왔다. 종무실 조직은 종무실장을 중심으로 종무관, 종무1과 종무2과로 구성돼 있다. 종무실장과 종무관은 종무1, 2과를 총괄하며, 종무1과는 불교, 유교 및 민족종교 관련 업무와 전통사찰 및 향교재산 보존 관리를, 종무2과는 개신교, 가톨릭 관련 업무와 남북 및 국제 종교교류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종무실이 폐지될 경우 문화정책실장이 문화, 예술 업무외에 종무까지 함께 맡게 되며, 종무1, 2과에 배치된 17명의 현재 인원도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된다. 자연히 현재보다 종무기능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종교계의 입장이다.

지방 분권화 조직 개편안과 맞물려

"문화정책실장이 겸하면 종무기능 축소"

"종교도 자생력·독자성 갖춰야" 자성도

게다가 종무실장 직책이 그대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문광부 안대로 종무실장이 종무 외에 문화와 예술 분야를 통합해 관리할 경우 현재만큼 종무에 업무력을 집중시키기는 어렵다고 종교계는 보고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정신적·도덕적 가치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종무실이 폐지될 경우 종교 정책이 흔들리게 되고 따라서 정신적 황폐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문광부는 기구 축소가 기능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전통사찰 보존 업무 등을 현실에 맞게 다른 기관에 이관하고, 필요한 업무는 개편되는 조직 속에서 효율적으로 관장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 이번 개편작업에는 예술, 문화, 체육 등 전 분야가 포함되기 때문에 특정 부서를 예외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종교계에서도 종무실 축소에 대해 반대 입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시대흐름에 맞게 종교와 정부와의 관계도 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조계종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각 종교가 각종 사업의 예산 확보 등을 이유로 종무실과 '유착관계'를 형성해왔고, 이것이 정치와 종교 분리에 역기능을 한 측면도 있다"며 "정부의 정책에 좌우될 것이 아니라 각 종교도 자생력과 독자성을 갖고 기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광부 안이 어떻게 확정될지는 아직 미지수나 종무실 폐지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다만 문광부와 정부혁신위원회 간의 논의과정에서 새로운 방향이 모색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종무실은 1968년 문화공보부 문화국 산하의 종무과로 출발했다가 1979년 종무국으로 개편된 뒤, 1982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종무실로 대폭 확대됐다. 이후 종무실은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개편대상에 올랐으나, 종교계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경부고속철 대안노선찾기 실패

7월 28일 마지막 기회 … 두달간 활동 마감

전문위원 선정 진통·시한 쫓겨 합의 못봐

의견서 제출 … 총리실 최종결정만 남아

금정산과 천성산을 관통하는 기존 경부고속철도 부산 노선의 대안을 찾기 위해 출범한 '대안 및 기존노선 재검토위원회(위원장 정순택·이하 노선재검토위)'가 7월 28일 마지막 회의를 갖고 두 달간의 활동을 마감했다.

결국 대안노선에 대한 이렇다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난 노선재검토위는 이날 국무조정실에서 시민종교대책위측 9명과 사업시행자측 10명, 국무총리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 자리에서 전문가 11명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의견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특정 노선을 지지하는 식의 지적은 하지 않고 개인별 의견을 낸 차원이라고 노선재검토위는 밝혔다.

당초 노선재검토위는 기존 노선과 대안노선 가운데 부산노선에 대한 최종 합의점을 도출하기로 했지만 전문위원 선정, 활동 기한 등의 문제로 진통을 겪어온 데다 활동시한의 제약으로 인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노선재검토위는 위원회 활동 경과 보고서에서 "천성산과 금정산을 통과하도록 설계된 기존노선의 터널공사로 금정산 지하수 유출 및 정족산 무제치늪 훼손 우려에 대해 보완이 가능하다는 주장과 문제발생 소지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맞섰다"고 설명했다.

또 "2개의 대안노선은 민원발생 소지나 막대한 보상이 불가피해 공사착수에 상당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검토위원회는 그동안 일곱 차례의 회의를 통해 '경부고속도로~양산천~양산신도시~경부선~부산역' 노선과 '경부고속도로~양산시 동면~금정산 만덕터널~부산역' 노선을 대안으로 좁히고 합의안 도출에 주력해왔었다. 이로써 지난 2001년 말부터 계속된 경부고속철도 부산노선을 둘러싼 논란은 이제 총리실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놓게 됐다.

그러나 총리실이 최종 노선을 결정한다고 해도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대안노선을 찾기 위해 노선재검토위를 구성하긴 했으나 두 달의 짧은 기간으로 현장조차 가보지 못한 채 조사를 완료한 노선재검토위 활동 자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대안노선으로 거론되고 있는 양산천 관통 대안노선에 대한 양산시민들의 반대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또한 노선재검토위 작업이 천성산 구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지율스님을 비롯한 천성산보존대책위가 배제된 채 진행돼 노선재검토위의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노선재검토위가 제출한 의견서만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경우, 38일간의 단식으로 환경운동의 인식전환을 가져 온 지율스님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지율스님은 기존 노선이 강행될 경우, 단식에 이어 또 다시 거리에 나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노선재검토위에 참여했던 시민종교대책위 도관스님 또한 "짧은 조사기간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의견서를 제출했을 뿐"이라며 "기존 노선에 대한 정확한 환경평가, 지질 문제 등에 대한 조사가 나올 때까지는 공사 강행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문제를 북한산 문제와 마찬가지로 공론(公論)조사에 의해 해결할 수도 있다는 의중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재검토위에서 제출된 의견서를 토대로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에서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한 당초 방침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문제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산= 천미희 기자

한국재가불자 헌장 선언문

새천년(2003년)을 맞아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세상은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낡은 사고와 관행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은, 무상 무등등의 진리라 하더라도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변화를 주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생명력을 갖거나 유용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불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새롭게 열리는 세상을 구제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왠지 자신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불교는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희망적 요소가 아주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1700년 역사를 이어온 저력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가장 많은 신도를 확보하고 있는 유력한 종단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뛰어난 포교사가 등장하고 있기도 하고, 천년을 잠들어왔던 거사불교가 조금씩 기지개를 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거기에 만족하기에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광범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한국불교가 민족의, 인류의 희망이자 등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님들에게, 종단에게, 몇몇 이름 난 지도자들에게만 이 급박한 현실을 언제까지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런 의존이 우리 한국불교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재가불자들이 그 동안 수동적 태도에서 과감히 벗어나 불교의 중심으로 새롭게 등장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한국불교의 희망은 재가불자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가불자가 변할 때 한국불교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입버릇처럼 되뇌는 불교중흥이나 불국정토건설은 재가불자들이 달라질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거룩한 승가의 재가불자들이 당당히 설 때 불교의 밝은 미래는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몇몇 뜻있는 재가불자들은 오늘 그 시급하고도 의미 있는 변화를 추동해내기 위한 모임을 결성하고자 합니다. 누구를 배제하고 배척하는 모임이 아니라 순수하게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조금씩 한국불교를 변화시키는 유마의 모임을 발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격언을 거론치 않더라도 재가불자들이 스스로 변화를 다짐하면서, 떨쳐 일어남은 소중한 변화를 향한 '소리는 작지만 울림은 큰 거사'라고 자부합니다. 변화는 구호나 거창한 조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재가불자들 각자가 생활 속에서 108배를 통해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염불을 통해 신심을 고취시키며, 경전을 공부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이웃에게 불법을 전하는 원력과 실천이 있을 때 한국불교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이 작은 울림이 끝내 한국불교를 바꿔내고, 마침내 세계일화를 이뤄내는 거대한 법륜의 포효로 확대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재가의 깃발 높이 세우고 새 불교, 새 세상을 향한 법륜 굴리는 일에 나서고자 합니다. 이 장엄한 대열에 뜻있는 재가불자들의 동참이 요원의 불길처럼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불국정토 그날까지 구르라,
재가의 법륜이여! 재가의 깃발이여! 펄럭이라

불기 2547년 7월 22일

붓다클럽 108발기인 일동

재가불자헌장실천을 위한 108발기인 윤청광(고승열전작가), 공종원(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임선교(UBF 한국본부장), 김흥국(해병 불자가수 회장), 남강수(불자가수 회장), 김형중(교법사 단장), 이진호(연합포교사 단장), 이상우(동산불교대 총 학생회장), 김태복(장군), 김정순(여성불교통일 회장), 김태제(경기불교회관 이사장), 김대원(산악인 연합회사무총장), 신근식(전 삼보법회회장), 김재일(동산반야회장)외 94인

buddha 붓다클럽 Tel. 02) 732-1215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동산불교회관

붓다클럽 이렇게 추진합니다

재가불자헌장 5대 실천덕목

- 나는 매일 부처님전 108배로 새로운 삶을 실천한다.
우리들의 하루는 인사하고 절하는 것으로 그날 아침을 연다. 불자들이 부처님께 절하는 것은 부처님을 공경하는 것이며, 당연한 신행의 모습이다. 절하는 그 모습에 하심(下心)이 있고, 반성과 참회가 있으며, 업장소멸이 이루어진다. 또한 매일 108배를 실천하면 하는 자에게 건강이 따라온다. 불국정토를 실현하는데 건강해야 할 수 있다. 그리하면 날마다 새로운 삶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 나는 매일 염불(참선) 천 번을 칭명한다.
불교인의 여러 수행방법 중에 염불(나무아미타불)이 가장 으뜸이다. 왜냐하면 염불은 아이들이나 여러 어른들이나 지식층이든 보통사람이든 누구든 가정, 직장 어느 곳이든 할 수 있기에 대중성이 강하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참선을 즐겨하는 사람은 선정에 들어가는 것도 무방하다.

- 나는 매일 경전을 독송하고 이웃에게 전한다.
한국불교는 지금도 경전을 배우는 일을 소홀히 하며, 불자들 역시 부처님께 복을 달라고 하거나 재앙을 없애달라는 일방적인 요구 신앙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부처님의 경전을 통해서 알고 수행하면 무명(無明)이 없어지고 만복이 찾아오고 갖가지 재난이 사라짐을 확신해야겠다. 그래서 부처님 진리를 이웃에게 전법하는 포교사가 되자. **(전회원에게 붓다클럽성전 보급)**

- 나는 매일 정기적 사회봉사활동에 동참한다.
불교도들은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이웃과 사회에 실현해야 한다. 건강한 가정 밝은 사회를 위하여 준법정신준수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 자연보호활동 및 공공장소 청결을 위한 쓰레기제거활동 등을 전개한다.

- 나는 매일 일정액(월 1만원)을 보시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우리는 정기적인 헌금, 보시정신이 빈약하다. 많은 불자는 복을 구하는 데는 쉽게 시주한다.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을 구제하는 일이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는 습관화 되지 못했다. 붓다클럽 회원이 월 1만원을 보시하여 무의탁 노인, 소년 소녀 가장 등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앞장서는 불자가 되자. 사회와 불교가 서로 어울리고 서로가 필요한 존재, 특히 사회가 불교를 필요하게끔 만들자.

1. 일 정 · 2003. 7. 23 ~ 10. 26 시·도별지역 조직 및 모집 / · 2003. 10. 27 붓다클럽 다짐대회
2. 조 직 · 붓다클럽은 전국조직으로 구성한다 / · 붓다클럽은 시·도지역 행정조직으로한다.
3. 회 원 · 재가불자 누구나 가입가능. 전화 02)732-1215
4. 운 영 · 붓다클럽의 모든 운영은 정관에 의해서 결정되며, 정관은 다짐대회까지 완료한다.